2019. 4. 5. (금) 언론보도

SBS

2019년 04월 06일 (금)
종합

유엔사 "DMZ 평화 둘레길 가능성 긍정 평가... 관광객 안전 최우선"

유엔군사령부는 오늘(5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DMZ 평화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 및 군과 평화둘레길에 대해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공보실은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엔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민간 관광객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는 "최종 승인에 앞서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매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DMZ 평화둘레길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문객이 DMZ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통문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DMZ 남방한계선까지만 방문하는 강원도 고성 코스부터 DMZ 평화둘레길 관광사업을 시작하고, 추후 DMZ로 진입하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코스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MBC
2019년 04월 06일 (금)
종합

유엔사 "DMZ평화둘레길 가능성 긍정평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 및 군과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공보실은 "유엔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민간 관광객의 안전"이며, "최종 승인에 앞서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매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DMZ 평화둘레길에 참여하기 위해 관광객이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DMZ 남방한계선까지만 방문하는 강원도 고성 코스부터 평화둘레길 관광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DMZ로 진입하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코스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mbc.co.kr)

한겨레
2019년 04월 05일 (금)
북한/한반도정세 08면

DMZ 둘레길이 북 총격 사정권? 교전·포격 전제로 한 '과장'

팩트 체크

평화둘레길 정말 위험한가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안에 '평화안보체험길'(DMZ 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3일 발표하자, 일부에선 북한군 총격 사정권이라거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재발이 우려된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주장엔 과장된 면이 적지 않다.

■ **평화둘레길이 '북한군 사정권'?** 평화둘레길이 개방되면 관광객들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고성(통일전망대~금강산전망대) △철원(백마고지 전적비~화살머리고지 비상주 감시초소(GP·지피)) △파주(임진각~철거 지피) 등 세 구간에 갈 수 있다. 특히 철원, 파주 구간에서는 일반인이 처음으로 일반전초(GOP) 철책선 너머 남쪽 지피까지 둘러볼 수 있다. 일부에선 이들 지피와 가장 가까운 북쪽 지피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발적 사고로 관광객이 다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철원의 비상주 지피와 파주 철거 지피는 북쪽 지피와 각각 1.9㎞, 1.2㎞ 떨어져 있다. 북한군 AK소총의 '유효 사거리'(부기가 표적을 타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최대 사거리)는 500m 정도다.

또한 몇몇 언론은 해당 구간이 고사총이나 박격포 같은 중화기에 노출될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전쟁이나 교전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중화기로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도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특히 북한군이 실제 고사총 같은 중화기를 쓴다면 현재 운용 중인 안보견학장 10곳도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에서 평화둘레길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고사총(ZPU-2 또는 4)을 지상으로 쏠 때 최대 사거리는 8㎞ 정도인데, 시민들에게 익숙한 파주 도라산전망대를 비롯한 이들 안보견학장 역시 북쪽 지피와 1.6~3.6㎞ 떨어져 있다.

■ **'관광객 피격사건' 재발 우려?** 평화둘레길에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다. 금강산은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 땅이다. 평화둘레길은 엄연한 남쪽 지역이다. 2008년 사고 당시 북한군은 금강산 지역 북쪽 초소 가까이 접근한 관광객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소총을 쐈다. 평화둘레길 방문객들이 차량에서 내려 둘러볼 수 있는 남쪽 지피는 군사분계선 이남일 뿐만 아니라 북쪽 지피와 각각 1.2㎞(파주), 1.9㎞(철원), 1.6㎞(금강산전망대) 떨어져 있다.

■ **유엔사 허가 안 받은 둘레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철원과 파주 지피를 견학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마쳤고, 유엔군 사령관의 결재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는 계획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준비해왔다. 유엔사 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며, 현재는 유엔사령관의 공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 고사총 사정권?
북 중화기 고사총 사거리 최대 8㎞
시민들 즐겨찾는 도라산 전망대 등
기존 모든 안보견학장이 사정권 해당

금강산 피격사건 재발 우려?
둘레길, 북쪽땅 아닌 남쪽에 위치
북한군 AK소총은 유효 사거리 밖

유엔사 승인없이 발표?
국방부, 유엔사와 실무협의 마쳐
사령관 승인 결재절차만 남겨둬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국민일보

2019년 04월 05일 (금)
사설/칼럼 31면

DMZ 둘레길 사업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가칭) 개방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개 부처가 DMZ를 평화·안보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첫 개방되는 DMZ 평화둘레길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에 각각 DMZ 평화둘레길을 만들어 이달 말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2일 언론에 배포했다가 이튿날 정식 발표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수정했다. DMZ 외부에 만드는 고성을 먼저 개방하고 DMZ 안에 조성하는 철원과 파주는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이 일부 감시초소(GP)를 철수했지만 DMZ 안에서 남한 50개, 북한이 150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무장한 남북 군인이 GP에서 수색·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철원과 파주 평화둘레길에서는 관광객이 북한군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 2008년 7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례가 재발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과 안전 문제를 협의하지도 않고 평화둘레길 조성 사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는 DMZ 출입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최종 조율도 끝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으며 유엔사 내부 의사결정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관광객의 DMZ 출입에 관해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DMZ 개방과 관련해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DMZ는 국제적 생태보고"라며 "생태계 보전 장치가 전무한 현실에서 DMZ 개방은 생태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의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DMZ를 민간에 개방하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평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속전속결로 평화둘레길 개방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